

글로벌 리포트

# GLOBAL REPORT

발행일 : 2018년 5월 15일(화)

## 영국 지방선거 보면 한국 지방선거 보인다 ③

영국 정책 트렌드 200% 활용법



책임연구 이진 해외통신연구원  
진행 전략기획실

글로벌 리포트

# GLOBAL REPORT

발행일 : 2018년 5월 15일(화)

## 영국 지방선거 보면 한국 지방선거 보인다 ③

영국 정책 트렌드 200% 활용법



책임연구 이진 해외통신연구원  
진행 전략기획실

## 핵심 포인트

- ▶ 2000년 지방정부법 개정 이후, 현재 직선제 **광역시장선거가 치러지는 영국 내 지역은 총 7개**
- ▶ 직선제 도입후 광역시장의 정치적 역량이 집중되는 정책 분야의 변화 트렌드 검토
- ▶ **주택정책 트렌드는 量에서 質로** : 과거의 단순 주택공급 정책에서 실질적으로 구매 가능한 주택, 지불 가능한 월세 정책으로 트렌드 변화
- ▶ **환경정책 핵심은 내연기관차의 세대교체** : 노후 디젤·가솔린차 환경세 부과 및 전기차 충전소 확대 등 투트랙 정책 시행
- ▶ **교통정책에서는 포폴리즘성 공약이 通** : 예산계획이 동반된 요금 동결·할인 공약으로 광범위한 유권자층 공약에 성공한 분야
- ▶ **기술교육정책으로는 ▲코팅 ▲엔지니어링 ▲디지털 기술 훈련 및 견습생 부담금(Apprenticeship Levy)제도 심화**
- ▶ **고용복지정책은 지역별 생활 임금(Living Wage) 정책의 전국화가 두드러짐**
- ▶ **사회안전정책** 중에서는 혐오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(Zero-Tolerance)의 강조가 눈에 띈다
- ▶ **[벤치마킹 포인트]** 現 정부의 정책실패를 비판할 수 있는 ▲주택 ▲환경 ▲안전 (성범죄) 분야를 중심으로 벤치마킹을 통한 빠른 이슈 선점 적극 검토 필요

- 
- ① 최근 영국 지방선거 3大 키워드(2018. 3. 5 발간)
  - ② 2016년 런던 시장선거 노동당 뒤집기 5대 성공요인(2018. 4. 5 발간)
  - ④ **영국 정책 트렌드 200% 활용법**

## | CONTENTS |

- I. 영국의 직선제 시장선거 / 1
- II. 영국 지방선거 분야별 정책 트렌드 / 2
- III. 벤치마킹 포인트 정리 / 8

---

이 보고서는 이진 해외통신연구원(英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·UCL 공공정책 석사, 영국 유학 中)이 작성한 글로 자유한국당·여의도연구원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---

# I. 영국의 직선제 시장선거

## ① 시장선거 연혁

- 2000년 지방정부법 개정 이후, 현재 직선제 광역시장선거가 치러지는 영국 내 지역은 총 7개
- 영국은 전통적으로 구/동(district/borough) 단위의 지역자치권이 강해, 2000년 법개정 이전에는 광역시장 선거 無
- 현재는 ▲런던(London) ▲맨체스터(Greater Manchester) ▲리버풀(The Liverpool City Region) ▲캠브리지셔셔어 앤 피터보로(Cambridgeshire and Peterborough) ▲티스밸리(Tees Valley) ▲웨스트미드랜드(The West Midlands) ▲노스미드랜드(The North Midlands)의 총 7개 광역지구에서 직선제 시장선거 진행

## ② 직선제 도입후 광역시의 정책 변화

- 영국 광역시장들의 정책적 영향력은 주로 ▲경제개발 ▲도시계획 ▲주택 ▲교통 ▲환경 ▲안전 ▲고용 ▲기술교육 분야에 집중

※ 본 보고서는 가장 최근 치러진(2016-17년 지선) 7개 직선제 광역시장 선거 공약집을 종합·분석하여, 영국 지방선거의 정책 트렌드를 점검하고 6·13 지방선거 벤치마킹 포인트를 요약

<그림1> 직선제가 치러지는 영국 7개 광역지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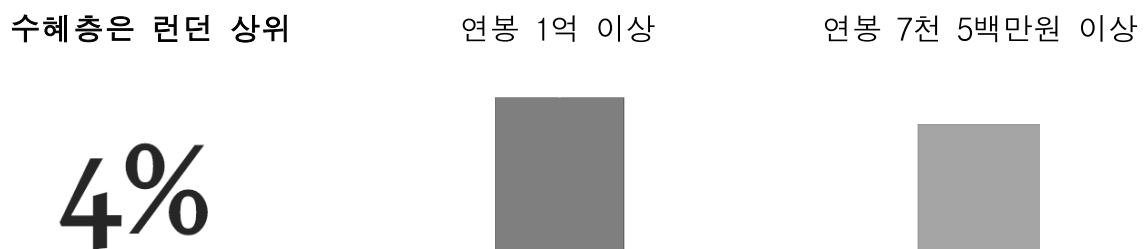
\* 검정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7개 광역지역

## II. 영국 지방선거 분야별 정책 트렌드

### 1] 주택정책 : 트렌드는 量 보다 質!

- 지난 10년 간 영국 정치권의 주택정책은 부족한 공공임대 주택물량을 공급하는 양적 정책 中心
  - 데이비드 캐머런 前 총리: 전국 새 집 20만호 공급('10 총선)
  - 보리스 존슨 前 런던시장: 런던에만 새 집 5만호 공급('12 지선)
- 정책의 주된 타겟층은 청년층과 서민층으로 한국과 유사
  - 공공임대주택 건설로 서민층을 공략하고, 첫 집 구매자 보조금(20%할인)으로 청년층을 공략하는 정책이 핵심
- 그러나 정책의 성과가 미약해 지방선거時 주택분야는 정부와 전임 시장(런던)의 정책 실패로 거센 비판을 받음
  -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필요량의 20% 수준에도 못 미쳤고, 청년층을 위한 생애최초 내집 마련 할인정책은 부동산가 상승폭(고수요 지역 20~30%상승)에 밀려 효과 無
  - 실제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청년층은 연봉 50,226파운드(약 7천 5백만원) 이상, 런던 거주자는 연봉 76,957파운드(약 1억)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층은 전국 상위 10%, 런던 상위 4%에 속했음(그림 2)

<그림 2> 기존 주택정책의 수혜층 및 수입



\* 자료 출처: Independent

○ 야당은 여당의 주택정책을 “서민층을 희생시켜 부자들을 살찌운 정책”이라 비판했고, 주택정책 프레임은 양에서 질 중심으로 전환

- [질적 변화 1] 지역 부동산 시세 고려한 정책 개발

- ‘진정으로 구매’ 가능한 주택, ‘진정으로 지불’ 가능한 월세 강조
- 예) 지역 2030세대 평균 월급의 1/3 이하 월세 물량 00호 공급

- [질적 변화 2] 월세 생활자 맞춤형 정책 개발

- 예) 집주인 명예장부 제작(Name&Shame rogue of Landlord)으로 지역 내 좋은 집주인과 나쁜 집주인 정보 공유

○ 2016-17년 영국 지선時 주택정책 이슈와 한국의 ‘금수저 임대주택’ 이슈의 결이 상당히 유사하므로, 상기 정책변화 트렌드를 벤치마킹할 적기

## ② 환경(미세먼지)정책 : 투트랙 정책으로 내연기관 차 세대교체 유도

○ 트랙 1: 노후차 규제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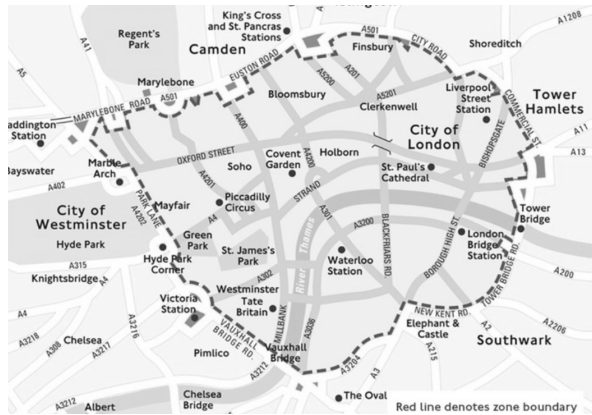
- 환경세(Toxicity charge, T-charge)

- 런던시는 2017년부터 등록한지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 중 EU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내연기관차(디젤휘발유차)에 대해 10파운드(약1만 5천원)의 환경세 부과

※ 기존의 런던 시내 혼잡통행료(Congestion charge) 11.5파운드(약 1만 7천원)와 별도로 진행해, 노후차량의 평일 시내통행요금은 약 3만원에 달함

- 노후차 규제 정책은 정부의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정책(2040년 판매 중단)과 맞물려 친환경차로의 세대교체를 가속화할 전망

<그림 3> 런던의 환경세 및 혼잡세 부과 구간



\* 출처: 런던 교통국, 점선 안쪽이 세금 부과구간

○ 트랙 2: 친환경차 보급 지원 및 캠페인 확대

- 지선을 기점으로 런던, 맨체스터, 리버풀을 비롯한 다수의 광역시에서 전기차 충전소 확대 정책이 일반화
- 시내버스 중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 1-2년 내 전수교체 및 임기 내 친환경 버스 비율 대폭 증대 약속
- 지역 공무차량 친환경차로 교체 시작

○ 영·유아 및 청소년 통학지역과 대기오염이 심한 시내 중심부에 대한 상규제 및 지원정책을 우선 시행하여, 규제에 대한 반발 최소화

한국 미세먼지 문제의 경우 중국의 영향이 커 국내 규제정책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클 수 있으므로, 상기 정책을 벤치마킹 하더라도 중국 發 미세먼지 대책이 반드시 동반될 필요

③ 교통정책 : 요금 할인 공약으로 광범위한 타겟층 공략 성공

- 2016-17년 지방선거에서 거의 유일하게 포퓰리즘성 공약이 통한 분야
  - 요금 동결: 4년 임기 동안 대중교통요금 동결(런던)
  - 16-18세 학생 교통비 반값 공약(맨체스터)



- 상기 공약을 주도한 노동당측은 자세한 예산확보계획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보수당의 포퓰리즘 공격에 선방함

<그림 4> 런던 시장선거 때 노동당 교통정책 홍보 포스터



\* 노동당 후보의 요금 동결(左) vs 보수당 후보의 17% 요금 증가(右)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포스터로 강한 인상을 남긴 노동당 후보

- 이 밖에 영국 교통정책 트렌드의 중심에는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확대 정책이 있으나, 한국의 경우 미세먼지 문제로 인해 벤치마킹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

#### 4] 기술교육정책 : 차세대 기술 훈련 및 견습생 제도 강화

- 최근 영국 정치권에서 강조하는 기술 훈련 콘텐츠는 ▲코딩 ▲엔지니어링 ▲디지털 기술
  - 학교와 산업현장 간 기술격차(Skills Gap)를 줄이기 위해 14세, 19세 등 기준 연령대 별로 전략적 기술훈련 시행을 공약
  -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일반인 기술교육도 병행
- 견습생 부담금(Apprenticeship levy) 정책의 전국적 강화
  - 견습생 부담금 정책은 年 급여 총액이 300만파운드(약52억원)를 넘는 기업에 급여총액의 0.5%의 견습생 부담금을 의무화 한 정책
  - 기업들은 부담금액에 상응하는 견습생 바우처를 정부로부터 받고, 이 바우처를 견습생 고용비용으로 사용 가능

※ 영국의 견습생 제도는 고등학생이나 고졸자가 기업에서 실무를 배우면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6-24세 청년이 지원 대상

## 5 고용복지정책 : 지역별로 생활 임금(Living Wage) 홍보 강화

- 런던, 맨체스터, 리버풀 선거 등 다수의 공약집에서 국가생활임금 (National Living Wage), 나아가 실질생활임금(Real Living Wage) 지지 및 홍보 확대
  - 국가생활임금은 국민들의 생활비를 고려해 연령대별로 최저임금 격차를 설정한 영국의 新 최저임금제도(2016년 4월부터 시행)
    - 2018년 기준 국가생활임금은 만 25세 이상은 7.83파운드, 21-14세는 7.38 파운드, 18-20세는 5.9파운드, 18세 미만 5.9파운드
  - 실질생활임금은 영국의 ‘생활임금재단 (Living Wage Foundation)’ 에서 발표하는 기준으로 런던과 런던 외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물가를 참고한 임금기준을 매년 발표
    - 실질생활임금은 생활임금재단 회원사인 3500여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지키는 기준
    -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실질생활임금을 따르는 지역기업들에게 법인세 혜택을 지원하는 등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공공의 실질생활임금 지지추세가 두드러짐

<그림 5> 생활임금 재단이 발표한 2018년 실질생활임금



\* 출처 : 생활임금재단(Living Wage Foundation)

○ 남녀 임금격차 해소 노력

- 시청, 공공기관, 협력업체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성차별 엄격히 감시·관리

6] 사회안전정책 : 혐오범죄에 대한 무관용(Zero-tolerance) 원칙 강조

○ 영국 혐오범죄 동향과 영국 검찰의 입장

- 영국내 무슬림 인구의 증가와 2013년 지하디스트에 의한 리 리키 상병 피살, 2016년 브렉시트, 2017년 맨체스터 공연장 테러, 런던브리지 테러 같은 주요 사건이 발생한 뒤 혐오 범죄 크게 증가

- 인종차별적 견해를 표현하기를 꺼렸던 사람들이 주요 사건 발생 후 대담해지고 SNS를 통한 혐오발언이 증가하고 있음

- 혐오범죄에 대한 영국 검찰의 대응

- 혐오범죄를 사회를 좀 먹는 우선순위 범죄로 규정하고 **사전대책** 마련

- 사이버 혐오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

※ SNS상의 혐오발언이 실제 사회적 혐오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인정하고 인터넷을 통한 혐오발언도 기소

○ 인종주의 혐오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 적용

- 인종, 종교, 성적 취향, 성 정체성, 국적, 장애 등에 관련된 혐오범죄에 대해서는 가능한 가장 강력한 처벌 기준 적용

※ 사디크 칸 런던 시장 : “브렉시트 투표가 혐오범죄 인정하자는 것은 아니다. 혐오범죄가 런던에 자리잡을 수 없도록 하겠다.”

### Ⅲ. 벤치마킹 포인트 정리

#### ① 이슈 선점 전략

○ 現 정부의 정책실패를 비판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이슈 선점

##### - [예시 1] 주택정책

※ 문재인 정부는 2018~2022년까지 5년간 공적 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는 『**주거 복지 로드맵**』을 발표. 입지가 좋은 지역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 등 공급 방법이 제한적이므로 입주경쟁이 치열 할 수밖에 없음. 지역거주자가 입주 우선 순위이므로 현재 수입이나 재산은 적지만 경제력을 갖춘 부모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선순위가 되어 ‘금수저 임대’ 논란이 생김

- 금수저 논란이 일고 있는 기존의 양적 주택 공급 정책에서 선회하여 ▲ ‘진짜 구매 가능한’ 주택 ▲ ‘진짜 지불 가능한’ 월세 등 질적 주택 공급 정책 이슈 선점

##### - [예시 2] 사회안전정책

※ 문재인 정부는 미투 운동 지지한다면서 정부 핵심인사의 권력형 성폭력에 대해서는 이중 잣대를 적용해 침묵함

- 미투 운동으로 전 국민이 성범죄·여성혐오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기 이므로 그 처벌에 관한 정책적 ‘무관용 원칙’을 적극 홍보

##### - [예시 3] 환경정책

※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뚜렷한 외교대책이 없고, 다른 부문의 감축 병행등 근본대책 없이 석탄발전소 10곳 폐쇄와 같은 단발성 미봉책 뿐임

- 미세먼지 해소를 위한 ‘노후차 규제 강화’, ‘친환경차 보급 지원’ 이슈를 선점하여,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 의지 홍보

## ② 선제적 방어 전략

○ 진보측이 강세를 보이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대안적 정책 개발이 필요

- [예시 1] 생활임금제(Living Wage)

- 이번 지선에서 진보진영이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 생활임금제도의 전국 정책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, 국민들이 영국 여론처럼 생활임금제에 긍정적인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대응 정책 개발 필요

- [예시 2] 교통요금 동결 등 포퓰리즘성 정책

- 진보진영이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포퓰리즘성 복지정책 리스트를 작성하고, 예산 등 관련 공격포인트를 준비할 필요

## ③ 중장기 아젠다 전략

○ 선거에서 쟁점화될 가능성이 낮은 분야라 할지라도, 성장 담론에 강한 보수당의 강점을 살려나가기 위해 지역 성장 정책은 중장기 아젠다로 심도있게 준비할 필요

- 청소년 및 지역주민 차세대 기술 훈련 정책, 견습생 제도 정책 등

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8 한양빌딩 4층  
TEL : 02, 6288, 0502 E-mail:ydi@ydiins.or.kr Website:www.ydi.or.kr

---

여의도연구원은 해외 정당정책 트렌드와 주요 싱크탱크 콘텐츠를 소개·분석하는 기획 보고서 「글로벌 리포트」를 발간하고 있습니다.  
보고서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, 자유한국당과 여의도연구원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